



지역축제를 반성한다

한 양 명(韓陽明)

안동대 국학부 교수

‘축제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도 어디선가는 축제가 기획되고, 또 어디선가는 축제의 낮과 밤이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雨後竹筍’이 아니라 ‘雨後祝祭’라고 하는 말이 더 없이 잘 어울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무려 308개의 축제가 다양한 이름으로 열렸다. 이름은 각양각색이지만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축제들의 공통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축제의 상품화이다. 축제의 관광상품화나 문화상품화라는 담론은 그 외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내포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동시대 축제의 목표로 설정된 축제의 상품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아쉽게도 그 대답은 부정적

이다. 아주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제의 상품화는커녕 아까운 공공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며, 그동안 전국 각지의 내로라하는 지역축제들을 조사한 바 있는 나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너도 나도 축제만 열면 지역문화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세계화하고, 지역의 관광산업이 진흥되고 경기가 활성화하리라고 믿고 있는가? 한 번만 치뤄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될 터인데도, 고개 한 번 돌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수많은 축제들이 쓴맛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도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왜 불나방처럼 축제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일까?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축제의 기능에 대한 관점으로는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존재론적 관점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관점은 축제가 얼마만큼 돈이 되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축제의 성패는 그 축제가 얼마만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관점은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민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축제의 성패는 지역민들이 축제를 통해서 체험하는 공동체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의 질과 정도에 달려 있다.

이에 비해서 존재론적 관점은 사정이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효과도 사회적 효과도 아니다.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축제에 참여한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이 축제를 통해서 자기 존재의 의의를 자각하고, 그래도 세상은 살 만한 곳이라는 생애의 대긍정을 경험하며,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을 통해서 공동체적 자아를 수립하고, 이 모든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일상의 삶을 새롭게 꾸려나갈 활력을 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존재론적 관점에 의하면 축제의 성패는 축제에 참가한 개개인의 체험의 질을 통해서 측정할 수밖에 없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요즘의 축제에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것은 경제적 관점이다. 속된 말로 '축제는 돈이 되어야 하며 돈이 되는 축제만이 제대로 된 축제'라는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다. 마치 인플루엔자처럼 우리 주위를 떠돌아 다니며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축제의 상품화라는

담론에는 축제를 하나의 공산품 정도로 취급하려는 불온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역문화와 경제의 활성화에 대해 거시적 전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정책 당국에서는, 축제의 상품화를 가장 손쉬운 방책으로 보고 이것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별다른 배후산업이나 부존자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추김과 지역 정치의 역학이 교묘하게 맞물려서 축제의 상품화를 신앙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축제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들을 통해서 그들의 존립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문화산업과, 관광에 드리워진 음울한 그림자들을 애써 외면하고 관광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떠들어대는 관광지상주의자들의 부추김도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나는 이처럼 축제를 상품으로만 인식하는 경제 지상주의적 관점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사람이다. 축제는 다른 무엇이기에 앞서 축제이며, 참가자의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지역민들의 유대와 정체성 강화라는 사회적 기능까지도 자연스럽게 충족시켜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축제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기능을 완전히 도외시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된 지 이미 오래고 시장경제의 논리가 최고의 권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효용성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축제 본연의 문화적 의미를 간과하는 데 있다. 이미 알고 있듯이 현대의 축제는 그 개념의 외연이 무한정 확장되어 판촉을 위한 이벤

트마저도 축제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으며 다종 다양한 테마이벤트들이 축제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아예 돈벌이를 위해서 혹은 다른 특별한 의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축제 아닌 축제들은 경제적 효과 또는 또 다른 효과를 지선으로 삼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연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전제로 벌어지는 공동체축제는 사정이 다르다.

일부 테마축제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축제들은 공동체축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축제 역시 경제적 부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만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의 축제를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를 최우선으로 삼아서는 지역민들의 존재론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려우며 그토록 간구하는 경제적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 경제적 효과에만 치중하다보면 지역민들은 자연히 타자화할 수밖에 없으며, 타자화한 지역민들이 극장의 관객처럼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관이 폭발적인 매력을 내뿜는 관광상품 또는 문화상품이 되는 일은 어렵기 때문이다.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보자면, 경남 창녕 영산의 삼일민속문화제와 같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지역민 대다수가 주체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축제에서 지역민들은 축제의 주체가 아니라 타자로 전락하였으며, 타자화한 지역민들은 축제의 연행들을 일상과 구별되지 않는 축제의 또 다른 볼거

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축제의 활력은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처럼 활력을 잃은 축제, 지역민들에게 외면 당하는 축제가 어떻게 국내외의 구매자들을 끌어들이는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겠는가?

문제는 지역민의 주체화이다. 지역문화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그만그만한 연행들을 찍어내어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전통문화와 현재의 문화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여 추구해야할 문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심적 연행들을 설정하여 지역민들 대다수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축제에 참여하여 제 신명에 겨워하며 축제에 빠져들고, 저 브라질의 카니발에서 볼 수 있는 비일상의 거대한 힘을 융출시킬 때, 국내외의 구매자들은 우리가 축제판에서 신명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즐기기를 위하여 지역축제를 찾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공동체축제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존재론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지 경제적 효과가 아니다. 축제의 상품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의 추구는 적어도 앞의 것들과 병행하거나 결과적인 것이어야지 축제의 존립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역민의 주체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축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축제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생산과 소비의 과

정에서 지역민들의 총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것은 우리 축제의 역사이다. 종교사학자 엘리아데(M. Elide)가 이야기하였듯이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근대사회에서 중요한 세시로 존재하면서 마을과 고을을 단위로 전승되었던 전통축제는 일상의 시공간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비밀상성,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하나되는 대동성, 경비와 조직을 그들 스스로 감당하는 자주성,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성, 일하는 이들이 앞장서는 민중성, 모든 이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는 개방성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던 전통축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전승이 중단되었다. 축제를 전승하던 공동체문화의 균질성이 자본주의 경제의 틈입으로 점차 부서지면서 축제는 쇠잔해갔으며 갖가지 해괴한 법령을 동원하여 우리의 축제문화를 금압한 일제의 무자비한 우리문화 말살책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 축제의 전승을 중단시켰다.

그러다가 대개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각 지역에서 이른바 향토축제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취지 아래 새롭게 만들어진 향토축제는, 많은 경우에 민속을 발굴 복원하여 재현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전통에 기대어 있지만 전통적 축제

의 껍데기만을 빌려온 창출된 축제였다. 문제는 창출되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배이데올로기 생산자들의 기획 속에서 타율적으로 만들어져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진 축제라는 데 있다. 자생적인 지역민의 축제는 일제에 의해서 단절되고, 단절된 축제가 다시 새로운 지배권력과 그 에이전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축제라는 이름으로 지역민들에게 주어지는 비민주적 전개과정을 우리의 축제는 거쳐왔다. 이와 같은 양상은 지역문화의 활성화라는 문화정책을 배경으로 123개의 축제가 만들어진 1980년대나, 문화의 세계화와 축제의 상품화라는 담론과 맞물려 200여개의 축제가 신설된 1990년대의 경우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어느 경우에도 대다수 지역민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축제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것은 축제의 조직자나 참여자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서 특정 집단에 의해서 축제가 만들어지고 지역민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구도가 어느새 우리 축제문화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축제 본연의 문화적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론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은 그 축제가 해당 지역민들의 총의를 배경으로 생성된 자생적 축제일 때 제대로 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축제는 자생적인 축제가 아니라 왜곡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주어진 축제이다. 따라서 축제 본연의 문화적 의미를 발현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축제 본연의 문화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민으로부터 빼앗은 축제를 그들

의 축제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지역축제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조정 작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념은 당연히 축제 본연의 문화적 의미를 수행하는 쪽으로 자리잡아야 하며 구조는 전통사회의 축제가 그러하였듯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심신을 내어 맡기는 집단적 전이성(liminality)의 실천을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축제의 생산과 소비의 전국면에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

빼앗은 축제를 지역민의 축제로 되돌려놓는 작업은 이른바 세계화시대에 지역문화를 세계화시키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세계화는 비단 경제적, 정치적 부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부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의 세계화는, 경제와 정치를 비롯한 인간활동의 제부면이 사실상 문화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세계화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의 세계화야말로 우리 시대의 초마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문화의 세계화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이미 세계 수준에 있는 우리 문화 또는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우리 문화를 세계 문화시장에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문화의 세계화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진행은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주변부

적 성격을 지닌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와 같은 일방적 흐름을 수수방관하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보다 공세적인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문화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그 흐름에 맞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자를 수세적 세계화라고 한다면 후자는 공세적 세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세적 세계화는 무작정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는 국수주의적 자세를 견지하는 전근대적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는 불가능하다. 근대 전이기의 개화파와 반개화파의 사례는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둘 다의 실패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보다 유연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방식은, 공시적 차원과 통시적 차원에서의 변증법적 인식을 필요로 한다. 먼저 공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외래의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문화에 대한 부정으로 보고 우리 문화 속에서 녹여내어 보다 진전된 합의 문화를 창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통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전래의 우리 문화, 즉 전통문화와 작금의 우리문화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통시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공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맞물릴 수밖에 없으며 끊임없이 진행되는 맞물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문화는 세계적 보편성 속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이 지역문화이

다.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국가와 민족 단위의 약화를 전제하고 있으며 지역 단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세계화가 한편으로는 문화적 대립과 갈등을 낳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배태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수용할 때, 문화적 다원성은 그 존재의 의의가 약해지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세계화는 곧 지역화의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새삼 주목된다.

지역문화를 문화의 세계화의 기본 단위로 보았을 때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수준을 드높이고 지역민들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장으로서 시민축제를 지향하여야 한다. 문옥표에 의하면, 다단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고 이질적으로 분화된 지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상징과 표상을 제시한다는 것이 시민축제의 기본 발상이기 때문이다. 시민축제에는 모든 시민들이 기존의 기득권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까닭에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출의 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축제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축제를 기획·입안·실행·평가하는 제 단계에서 시민들의 문화역량이 민주적 합의와 리더십에 의해서 집중되고 실천되는 과정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축제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문화의 창출은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과정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제의 제 과정에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역축제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그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문화적 역량이 포괄되고 집중된 지역축제는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출과 활성화의 기폭제이자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낼 것이다. **영민홍 남**